

# 「주요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

2022. 7.

## 총 괄

김우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 작 성

미국	구윤모 선임연구원 · 서동규 연구원
영국	한혜란 선임연구원
일본	강민채 선임연구원
독일	박지혜 선임연구원
프랑스	염보라 연구원

# 1. 미국

◇ 미국은 물가 인상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이미 실행 중에 있는 비축유 방출 정책 이외에, 유류세 유보, 원유 생산 활성화, 광물 증산 지원, 관세 조정 등이 언급된 바 있음

◇ 한편, ①식품 공급망 지원 및 ②휘발유 가격 폭등 방지 법안 등이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정책 결정 방향은 향후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통화 정책으로는, 1월에 이미 발표되었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에 이어 올해 초(3월) 한차례(0.25%p) 기준금리 인상 이후 5월(0.5%p)과 6월(0.75%p)에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

## 가. 실행 중인 정책

□ (비축유 방출)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 50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매일 1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석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6개월간(총 1억 8,000만배럴) 방출할 계획을 발표(2022.3.31.)<sup>1)</sup>

\* 전략비축석유 방출 계획이 언급된 2022년 3월 31일 기준, 미국은 5억 6,830만 배럴의 비축석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2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규모임<sup>2)</sup>

○ 비축유 방출 등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언급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현지 언론들은 정책적 옵션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2022.6.2.)<sup>3)</sup>

## 나. 언급되고 있는 정책

□ (유류세 유보) 바이든 정부는 유류세를 3개월(7~9월) 동안 유예하는 ‘유류 세금 휴일(Federal Gas Tax Holiday)’ 법안을 의회에 촉구함(2022.6.22.)<sup>4)</sup>

1)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31/fact-sheet-president-bidens-plan-to-respond-to-putins-price-hike-at-the-pump/>, 검색일자: 2022.6.24.

2)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biden-will-give-remarks-thursday-efforts-lower-gas-prices-white-house-2022-03-31>, 검색일자: 2022.6.27.

3) <https://edition.cnn.com/2022/06/02/politics/inflation-biden-governors/index.html>, 검색일자: 2022.6.23.

4)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2/fact-sheet-president-biden->

\* [주요 유류세율]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연방세금은 1 갤런당 각각 18.3센트, 24.3센트 부과됨

\* [갤런당 유류가격 추이] (올해 초): 3.3달러 → (3월 말) 4.2달러 → (6월 말) 4.9달러<sup>5)</sup>

○ 다만,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유류세 유보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기에 최종 결과까지는 여론의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더 나아가 주 정부 차원에서도 주 유류 세금(state gas tax) 유예 등의 직접적인 완화 정책 또는 다른 방법의 소비자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함

\* 뉴욕 및 코네티컷 주는 임시적인 가스 세금 유예조치 중에 있음

○ 한편, 유류 관련하여 휘발유 리베이트 카드 발급 정책\* 또한 검토 선상에 있었다고 언급된 바 있었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크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휘발유 리베이트 카드는 특정 기간 주유한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정책이나 리베이트 카드가 연료 구매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정책 실행 가능성이 높게 보진 않고 있음<sup>6)</sup>

□ (원유 생산 활성화) 석유와 가스업계에서 임차 사용하고 있는 석유 시추용 연방 부지에 대해, 원유 생산 작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sup>7)</sup>

\*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00만 에이커 면적의 연방 부지에서 생산 허가를 받았으나 시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전만 9,000개라고 언급

□ (광물 증산 지원) 물가(석유 가격) 인상의 장기적인 억제책으로 클린 에너지 경제 강화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에 활용되는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sup>8)</sup>)을 발동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할 방침<sup>9)</sup>

---

calls-for-a-three-month-federal-gas-tax-holiday/, 검색일자: 2022.6.23.

5) 전미자동차협회(aaa), <https://gasprices.aaa.com/>, 검색일자: 2022.6.28.

6) CNN, <https://edition.cnn.com/2022/06/17/politics/white-house-gas-rebate-cards/index.html>, 검색일자: 2022.6.27.

7)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21/fact-sheet-biden-administration-responds-to-putins-price-hike-by-awarding-first-barrels-from-historic-strategic-petroleum-reserve-release-deploying-affordable-clean-energy/>, 검색일자: 2022.6.23.

- 국방물자생산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임
- (관세 조정)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2018년부터 실시했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유지했었는데, 물가 인상 대응 목적으로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함(2022.6.20.)<sup>10)</sup>
  - \* 연간 약 3,500억달러 규모(중국의 대미수출의 3/4에 달하는 규모)의 중국산 제품 대부분에 최고세율 25% 관세 부과

#### 다. 의회 논의 중인 법안

- (가격 폭등 방지) 미 의회 하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격 부풀리기 방지법안(S. 3920; Gas Price Gouging Prevention Act)은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위기 기간 중에 휘발유 가격 부풀리기 방지를 목표로 함<sup>11)</sup>
- 동 법안은 원유시장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비상시기에 휘발유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 및 불공정한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동 법안 적용은 대통령의 위기 선포기간을 한 번에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하며,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법 집행 주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식품 공급망 지원<sup>12)</sup>) 최근 하원을 통과(2022.6.16.)한 육류 및 가금류 특별조사관 법(H.R.7606; Meat and Poultry Special Investigator Act of 2022)을 통해 식품 생산 비용 저감 및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동 법안은 식품 및 농업 부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21년 포장업 및 가축사육장법(Packers and Stockyards Act of 1921)에 적용되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

8)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기업의 생산력을 활용하여 물자를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의 주요 권한

9)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31/fact-sheet-president-bidens-plan-to-respond-to-putins-price-hike-at-the-pump>, 검색일자: 2022.6.23.

10) cnn, <https://edition.cnn.com/2022/06/20/politics/biden-trump-tariffs-china-inflation-economy/index.html>, 검색일자: 2022.6.27.

11) govtrack,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7/s3920/summary>, 검색일자: 2022.6.28.

12) 미 하원, Cost Estimate, H.R. 7606, Meat and Poultry Special Investigator Act of 2022,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7606>, 검색일자 2022.6.28.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특별 조사관실을 미국 농무부 내에 설립하는 법안임

- 이 법안을 통해 설립될 특별 조사관실은 10명의 변호사를 고용해 육류 및 가공육 가공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여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CBO는 이 법안 시행에 2022~2027년 기간 동안 9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sup>13)</sup>

## 라. 다자 협력 방안

- (다국적 협력 지원) 백악관은 대내 중심 정책 외에도 5월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협정프레임워크<sup>14)</sup>(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sup>15)16)</sup>을 통해 참여국<sup>17)</sup>들과 함께 경제 연대, 클린 경제, 공정 경제 및 물가 급등 대응을 목표로 한 ‘경제복원’ 화두를 주요 현안에 포함시켜 다국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sup>18)</sup>
- 경제복원의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물가 급등 대비가 가능한 더 나은 경제복원력 창출을 목표로 조기 경보 시스템, 주요 광물 공급망 지도 구축 등 공급망 협력 의견을 공유함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대국으로서 IPEF를 통해 해당지역의 미국 경제리더십을 확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공급망 복구력 개선을 통해 물가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3) CBO, Cost Estimate, H.R. 7606, Meat and Poultry Special Investigator Act of 2022, <https://www.cbo.gov/publication/58173>, 검색일자 2022.6.28.

14)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주요 협력 원칙 공유를 통해 파트너국들과 함께 IPEF 발전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 (관련 링크 아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27/readout-of-president-bidens-participation-in-the-east-asia-summit/>)

15)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fact-sheet-in-asia-president-biden-and-a-dozen-indo-pacific-partners-launch-the-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 검색일자: 2022.5.24.

16)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statement-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 검색일자: 2022.5.25.

17) 미국을 포함하여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2년 5월호 재정동향」, 2022.5.에서 발췌

### [참고] 물가 인상 대응에 따른 연준의 최근 정책

- 2022년 1월 FOMC 회의를 통해 대차대조표 축소 원칙을 발표<sup>19)</sup>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자산 매입 속도 완화의 연장선상으로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원칙을 발표함
  -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준 금리 변화 및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를 공식화함
- 2022년 3월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sup>20)</sup>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된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을 원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0.25% 수준에서 0.25~0.50% 수준으로 인상
  - 또한, 다음 FOMC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
- 2022년 5월 및 6월 FOMC 회의를 통해 빅 스텝(Big Step) 및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시행<sup>21)</sup>
  - \* 6월 회의 결정문과 함께 발표된 경제 전망은 기존 3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의 전망치보다 2022년 인플레이션과 2022년~2024년 기준금리가 더 높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존 전망을 수정함
  - 대차대조표 축소 및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p(Big Step) 인상하고 6월에는 0.75%p(Giant Step) 인상함
  - 또한, 5월 회의를 통해 6월부터 3개월간 대차대조표 규모를 매월 475억달러(국채 3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150억달러) 감축하고, 9월에는 감축 규모를 950억달러(국채 6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35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결정함

19)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2.2.1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20126.htm>, 검색일자: 2022.2.21.

20)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2.4.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20316.htm>, 검색일자: 2022.4.20.

21)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5.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504a.htm>, 검색 일자: 2022.5.18.  
Fed, Plans for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2022.5.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504b.htm>, 검색 일자: 2022.5.18.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6.15.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615a.htm>, 검색일자: 2022.6.17.  
Fed, June 15, 2022: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sion, 2022.6.15.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220615.htm>, 검색일자: 2022.6.17.

## 2. 영국

### 가. 정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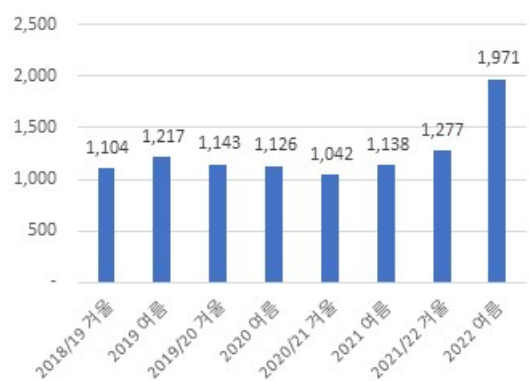
- 고물가, 에너지 요금 상한 상향 조정, 국가보험기여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영국의 가계 생활비 부담이 심화될 전망
  - 2021년 초부터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어 2022년 5월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1%로 198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영국 Ofgem(에너지 규제기관)은 가스 가격 급등을 고려해 2022년 4~9월의 에너지 요금 상한<sup>22)</sup>을 기존 1,277 파운드에서 1,971파운드로 54% 인상함
  -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 4월부터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에 따른 국가보험기여금 기여율 1.25%p 인상을 시행하고, 2022년 소득세 개인공제액과 고세율 과세 기준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지 않고 동결함

[그림 1] 전년 동월 대비 CPI상승률  
(단위: %)



자료: ON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2," 2022.6.22.

[그림 2] 에너지가격 상한(DTC) 추이  
(단위: 파운드)



자료: Ofgem, "Breakdown of the default tariff price cap(direct debit)," 2022.4.

22) 에너지 요금 상한은 에너지 공급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에너지 가격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해 연2회 업데이트함

#### 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sup>23)</sup>

- (개요) 영국 재무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계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3월(Spring Statement), 5월에 주요 지원 정책을 발표함
  - (2022년 2월) 에너지 요금 상한 인상을 고려해 정부가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요금 선할인과 카운슬세 환급 계획을 발표
  - (2022년 3월) ‘2022 Spring Statement’ 에서 국가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 인상, 연료세 인하, 에너지 저감 자재 VAT 감면 강화, Household Support Fund 추가 지원 등 생활비와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
  - (2022년 5월) 복지급여, 장애급여, 연금 수급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보편적 에너지 요금 지원 강화, Household Support Fund 자금 증액 등 추가 생활비 지원 패키지를 발표
  - 기타 부처에서도 TV 수신료 동결,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처방료 동결,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금리 최대 한도 설정<sup>24)</sup> 등의 개별 조치를 발표함
  
- (지원 내용)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 지원,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을 완화하고 5월 지원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 예정
  -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비 및 에너지 비용 보조금과 요금 감면을 지원
    - (복지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sup>25)</sup> 수급자(약 8백만가구)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한 650파운드의 보조금을 2회(7월, 가을)로 나누어 지급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예정; Harari, Daniel, Brigid Francis-Devine, Matthew Keep, Paul Bolton, and Rachael Harker, “Rising cost of living in the UK,”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6.; HM Treasury, “Overall government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factsheet,” 2022.5.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support-for-the-cost-of-living-factsheet/government-support-for-the-cost-of-living-factsheet>, 검색일자: 2022.6.27.; HM Treasury, “Cost of living support factsheet: 26 May 2022,” 2022.6.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cost-of-living-support-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6.27.; Mackley, Andrew, Brigid Francis-Devine, Francis Hobson, and Rachael Harker, “The Social Security(Additional Payments) Bill 2022-23,”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6.

24) RPI를 반영한 최대 예상 금리 12% 대신 7.3%의 최대 한도 금리를 설정

25)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소득 기반 구직 급여, 소득 기반 실업 급여, 근로 세액 공제 등

- (장애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 특별 장비·식품,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고자 장애급여 수급자(약 6백만명)에게 9월부터 150파운드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
- (동계 연료보조금 추가 지원) 동계 연료보조금을 받는 연금 수급 가구(약 8백만가구)를 대상으로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도록 이번 겨울에 추가 300파운드를 제공
- (저소득층 동계 전기요금 감면 확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동계 전기요금 감면(warm homes discount)<sup>26)</sup> 금액을 10파운드 인상(140→150파운드)하고 수급 대상도 약 1/3 확대(220만→약 300만 가구)
- (취약계층 지원 자금 확대) 식품, 에너지, 수도 요금 인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방당국이 재량적으로 지원하도록 Household Support Fund에 3월과 5월에 각각 추가 5억씩 자금 지원 확대(총금액 5억→15억파운드)
  - 또한 자금 운영 기간을 2023년 3월까지로 추가 6개월 연장함(5월 조치)
- (보편적 에너지 요금 지원) 모든 에너지 요금 납부 가구(약 2,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00파운드의 에너지(전기) 요금 할인을 제공할 예정
  - 2월 계획은 200파운드의 선할인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나 5월 계획에서 할인액을 2배로 증액하고 상환 요건도 폐지함
  - 지원 자금을 받은 전기 공급업체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10월부터 소비자에게 할인·환급<sup>27)</sup>을 제공
- (조세 부담 경감) 카운슬세, 국가보험기여금, 연료세 등 조세 부담을 완화
  - (카운슬세<sup>28)</sup> 환급(Council Tax rebate))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응해 2022년 4월에 카운슬세 부과 구간 A~D에 해당하는 가구(전체 가구의 약 80%)를 대상으로 150파운드의 카운슬세를 환급
    - \* 2월에 에너지 요금 선할인 조치와 함께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됨
  - 또한 지방당국에 재량적 지원 자금(1억 4,400만파운드)을 제공하여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sup>29)</sup>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 인상) 소득세 개인공제 기준액에 맞추어

26) 겨울철(10월~ 차년도 3월)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1회(정액) 감면하는 제도

27) 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요금 할인·환급·크레딧·바우처 등 지원 방법이 상이

28) 카운슬세는 주택의 자산 가치와 거주하는 성인 수를 바탕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 구간(A-H)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

29) 카운슬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카운슬세 부과 구간 E-H에 해당하는 가구

- 2022년 7월부터 국가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을 인상(9,880→12,570파운드)
- 약 3천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근로자들은 7월부터 연간 평균 330파운드 이상 절감 가능
  - (연료세 인하) 당초 동결 예정이던 휘발유, 경유에 대한 연료세를 3월 23일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5펜스 인하
  - (에너지 저감 자재 VAT 감세 강화) 에너지 저감 자재 설치 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수력 터빈, 풍력 터빈 등 포함)하고 2027년 3월까지 한시적 영세율(5%→0%)을 적용
- 또한 재무부는 기존 예산안에 포함된 통합급여의 수당삭감을 하향 조정, 주세 동결, 국가생활임금 인상 등의 정책도 가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표 1>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영국의 주요 지원 정책

(단위: 파운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시기	지원규모
<b>5월 지원 계획</b>				
복지급여 수급자 보조금 지원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수급자	650 (1차 326, 2차 324)	1차 7월, 2차 가을	54억
동계 연료보조금 추가 지원	동계 연료 보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	300	11/12월	25억
장애급여 수급자 보조금 지원	장애급여 수급자	150	9월	9억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 -2배 증액, 상환 요건 폐지	모든 에너지 요금(전기) 납부 가구	200→400	10월부터 6개월	60억 (누적 120억)
Household Support Fund 자금 증액	식료품, 에너지, 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	10월 ~'23.3월	5억 (누적 15억)
<b>3월 Spring Statement</b>				
국가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 인상(£9,880→£12,570)	-	-	7월~ 2025-26년	63억
휘발유, 경유의 연료세 리터당 5펜스 인하	-	-	3월 23일~ '23.3월	24억
에너지 저감 자재 VAT 감세 확대 -세율 인하(5→0%), 대상 확대	-	-	4월~ '27.3월	0.5억
Household Support Fund 자금 증액	식료품, 에너지, 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	4월~9월	5억 (누적 10억)
<b>2월 지원 계획</b>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 -선할인 후 추후 상환 방식	모든 에너지요금(전기) 납부 가구	200	10월	60억
카운슬세 환급	카운슬세 부과 구간 A~D 해당 가구	150	4월	30억
warm homes discount 지원 확대 -보조금 증액, 대상 확대	warm homes discount 수급 취약계층	140→150	2022-23년 ~2025-26년	3.5억→ 4.75억
기타 <sup>30)</sup>	-	-	-	*
<b>합계</b>				<b>370억</b>

자료 : HM Treasury, "Overall government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factsheet," 2022.5.26., 검색일자: 2022.6.27.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2, 2022.3.  
 Harari, Daniel, Brigid Francis-Devine, Matthew Keep, Paul Bolton, and Rachael Harker,  
 "Rising cost of living in the UK,"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6.

30) 주세 동결, 통합급여 수당삭감을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등 기존 발표 정책 포함(합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 규모는 별표(\*) 표시)

- (지원 규모) 영국 재무부는 가계 생활비 지원 정책의 올해 지원 규모를 약 370억 파운드로 추계
  - 이 중 5월 지원 패키지의 지출 규모는 153억파운드, 2월 지원 계획과 3월 Spring Statement의 가계지원 정책 규모는 220억파운드가 넘을 전망<sup>31)</sup>
  
- (재원 조달) 정부는 영국의 석유·가스 기업에 ‘에너지 기업 이익 부담금 (Energy Profits Levy)’ 을 새롭게 부과하여 가계 생활비 지원 비용의 일부를 조달할 계획<sup>32)</sup>
  - (규모) 첫 12개월 기간의 동 부담금을 통한 조달 자금은 약 50억파운드로 전망
  - (내용) 영국 및 영국 대륙봉에서 석유·가스를 탐사·추출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
    - (한시적 운용)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 시 단계적으로 부과 중단(2025년 12월말 일몰 조항 포함)
    - (투자 장려) 기업이 유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수익을 영국의 석유·가스 생산에 재투자하도록 부담금에 80%의 신규 투자 공제 제도를 포함
      - \* 기업이 1파운드 투자 시 총 91펜스의 조세 절감 효과(기존 공제 효과 포함) 발생

#### 다. 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생활비 지원 패키지는 가계의 에너지 비용 및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Resolution Foundation(2022, p.5)<sup>33)</sup>은 올해 발표된 주요 지원 조치들이 FY2022-23에 가계의 에너지 소비 비용 상승분의 약 82%(저소득 가구는 93%)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
  - 재무부 분석 보고서<sup>34)</sup>에 따르면 2월과 5월 발표된 주요 지원 정책을 통해 최저

31) 2022년 4월 시행된 국가보험기여금 인상과 소득세 개인공제액 동결 등 세금 인상까지 고려한 순(net) 정부 지원 규모를 FY2022-23에 140억파운드로 추정하는 분석도 있음(Harari, 2022,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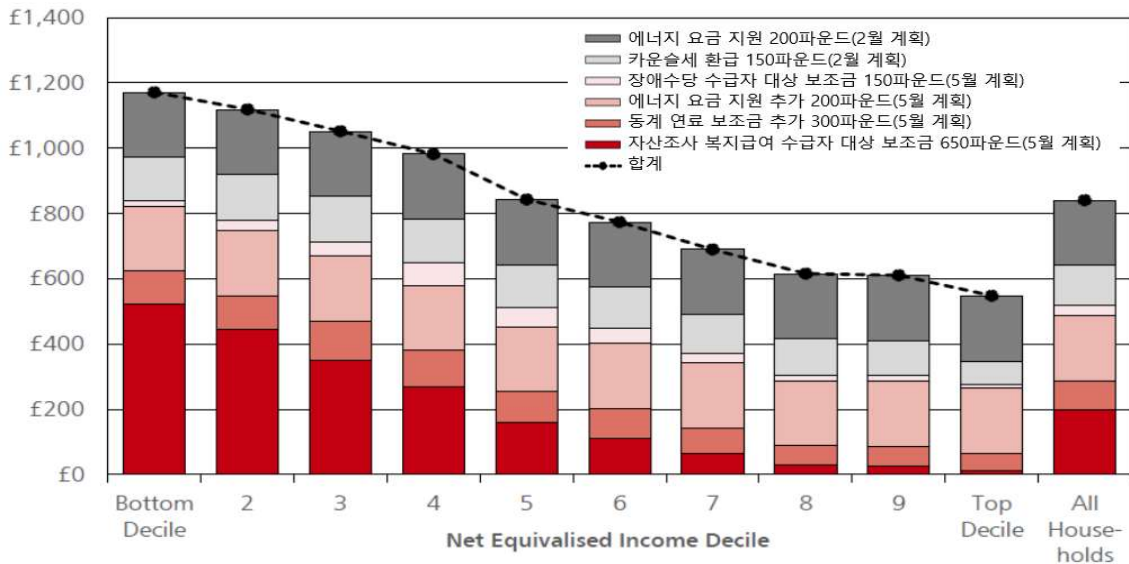
32) HM Treasury,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5.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6.7.

33) Resolution Foundation, “Back on target- Analysis of the Government’s additional cost of living support, 2022.5.27., <https://www.resolutionfoundation.org/app/uploads/2022/05/Back-on-target.pdf>, 검색일자: 2022.6.27.

34) HM Treasury, “Illust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May 2022 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 and February 2022 Energy Support package on households,” 2022.5.

소득 가구는 평균 1,170파운드의 지원을 받고, 특히 5월 지원 패키지는 저소득층에 더욱 누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3] 주요 지원(2월, 5월 발표)이 소득분위별 가계에 미치는 영향(금액 기준)  
(단위: 파운드)



자료: HM Treasury, "Illust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May 2022 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 and February 2022 Energy Support package on households," 2022.5., Chart 2.B.

- 정부지출 확대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은 5월 지원 패키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sup>35)</sup>이라고 언급
- 또한 영국 중앙은행의 내부 기초 분석은 최근의 생활비 지원 패키지로 첫 해에 GDP가 약 0.3%, CPI 인플레이션이 약 0.1%p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sup>36)</sup>

35) BBC, "Cost of living package will have minimal impact on inflation, says Rishi Sunak," 2022.5.26.

36) Bank of England, "Minutes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eeting ending on 15 June 2022," 2022.6.16.,

<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2/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june-2022.pdf>, 검색일자: 2022.6.27.

### 3. 일본

- ‘22년 4월 ‘원유 가격·물가 상승 등 종합 긴급대책’ 을 통해 물가 급등 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6월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sup>37)</sup>를 구성하여 물가 대응 동향을 발표함
  - 4월 ‘원유 가격·물가 상승 등 종합 긴급 대책’ <sup>38)</sup>의 예비비를 포함한 사업비 규모는 13.2조엔<sup>39)</sup>
    - 국비 6.2조엔(일반 예비비 0.4조엔,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1.1조엔, 추경 예산액 2.7조엔 포함))
  -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는 2022년 6월 21일 첫 번째 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을 설명함(2022.6.21.)<sup>40)</sup>
  
- (물가 동향) 우크라이나 정세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22년 전년 대비 2.5%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 물가상승률 2.5%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물가 대응 정책 등의 대응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 G20 국가의 절반 정도가 7%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나, 일본은 하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가. 가계부담 완화

- 아동 양육 가구,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에 대한 임시 특별 지원과 자립지원금 구직활동 요건을 완화

37)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는 본부장으로 내각총리대신, 본부 구성원은 각 행정부(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의 장(국무대신)과 내각부의 지방창생, 소비자 및 식품안전 장(특명대신) 및 고독·고립 대책 장으로 구성

38) ①원유가격 급등 대책, ②에너지·원자재·식품 등 안정공급 대책, ③새로운 가격 체계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대책 등, ④코로나19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직면하는 빈곤가구 등 지원으로 구성

39) 내각부, コロナ禍における「原油価格・物価高騰等総合緊急対策」, 2022.4.26.,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keizaitaisaku.html>, 검색일자: 2022.6.23.

40) 내각부,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2.6.21.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dail/bukka\\_tingin.pdf](https://www.cas.go.jp/jp/seisaku/bukka/dail/bukka_tingin.pdf)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물가 상승 대책, 2022.6.21.,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index.html>, 검색일자: 2022.6.27

- (육아 가구) 가구 연수입이 960만엔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고 0세부터 고교 3학년까지의 자녀 1인당 10만엔 상당의 임시 특별지원금을 지급
  - 3월말까지 약 1,700만 명에게 지급하여 현재까지 지급을 거의 완료함
-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주민세 비과세 가구<sup>41)</sup> 등에 지원금 미신청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지급, 1세대 당 10만엔 현금 지급
  - 4월말까지 약 1,300만 가구에 지급함
- (저소득 육아 가구) 아동 양육수당 수급 가구(저소득 한부모) 및 주민세 비과세의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해 생활 특별지원으로 아동 1인당 5만엔 지급
  - 아동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은 6월말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그 외 가구는 주민세 과세 정보가 완료되는 6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
- (자립지원금 요건 완화)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의 자립지원금 구직활동 요건을 완화함

#### 나. 고물가 대응 정책

- (물가 대응 정책) 에너지 및 식료품 등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해 가솔린 등 에너지 가격급등 완화 정책, 밀 국내 가격 상승 억제 정책 등을 추진
- (연료 가격 완화) 유가 급등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도매업자 대상 보조금 지원
  - 휘발유의 경우 4월부터 전국 평균 리터당 가격이 168엔 이상될 경우 1리터당 35엔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35엔 이상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초과분의 1/2를 지원하여 휘발유 전국 평균 리터당 가격을 168엔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동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sup>\*42)</sup>

\* 2022년 6월 13일 유가 보조금 지원이 없었을 경우 예측 가격은 210.6엔이고, 실제 전국 평균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171.2엔으로 집계되어 39.4엔의 인하 효과가

41) 주민세 비과세는 생활 보호를 받거나, 미성년자·장애인·미망인·한부모로 전년 소득 합계액이 135만엔 이하이거나, 전년 소득 합계액이 각 지방행정단체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인 경우 소득할과 균등할 모두 비과세 적용(일본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 부담(개인할)은 ‘소득할’ (납세의무자의 전년 소득에 준하여 부과)과 ‘균등할’ (모든 납세의무자로부터 균등하게 세금 징수, 도부현과 시정촌 금액 차이 있음)로 나뉨)

(住民税が非課税になる条件と受けられる恩恵のポイントまとめ, 2021.10.7.,

<https://biz.moneyforward.com/payroll/basic/13062/>, 검색일자: 2022.6.30.)

42) 政府 `ガソリン価格「激変緩和措置」 9月末まで期間延長,

<https://www.netdenjd.com/articles/-/266530>, 검색일자: 2022.7.14.

있었음

-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외에 항공기 연료도 대상에 포함
- 2022년 상반기 실시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기준가격 재검토 등을 계획
-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주택·빌딩 건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어린이 미래 주택 지원사업 확충 등
  - (연료 공급 긴급 대응) LNG·석유 개발투자 자금 지원 등
- (원자재 공급 확대) 전략 물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급 체인 강화
  - 반도체 제조용 가스, 팔라듐<sup>43)</sup>, 석탄 등 국내 생산 설비를 확대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회수설비 도입 등을 지원
- (업종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택시 연료 가격 지원 등
  - (어업) 경영 안전망(Safety net) 구축 사업 추진, 원유 가격 상승 대응 보조금 지급, 에너지 절약 장비의 도입 지원 등
  - (농림업) 시설·원예 등 원유 가격 상승 대책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산지 생산 기반 마련 지원, 시설·원예 농가 및 버섯·목재 가공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장비 도입 지원
  - (운수업) 택시 사업자에 대한 연료 가격 급등 완화 대책 시행
  - (생활위생관계업) 업종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 조사 및 절약 노하우 공유 등을 시행
  - (기타) 소규모 사업자 지원 보조금을 활용하여 LP가스 등 가격 상승 영향을 받는 사업자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적극적인 임금 인상 혹은 인적 투자 기업에 조세 인센티브 제공, 적자 중소기업이라도 임금 인상 시 보조금 보조율 인상, 안전망(Safety net)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 등을 9월 말까지 연장 등
- (전기요금) 2020년 4월 전력자유화<sup>44)</sup> 규제요금 경과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으

43) 점화 플러그 전극, 고급 수술 기구, 수소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되는 금속

44) 사설 전력회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소매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정책. 2016년 4월 이전에는 ‘일반 가정, 편의점 등’ 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법률에서 정해진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고, ‘회사빌딩이나 공장 등’ 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력자유화 적용을 받았으나, 2016년 4월부터 일반 가정 등에도 전면 전력자유화가 적용되었고, 2020년 4월까지 경과조치로 규제요금을 적용하였음

(경제산업성, 電力自由化で料金設定はどうなったの?,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fee/structure/liberalization.html](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fee/structure/liberalization.html),

검색일자: 2022.6.29.

\_\_\_\_\_, 電力の小売全面自由化,

나, 가정 등 사용 전기는 규제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료 상한<sup>45)</sup>으로 작용

- (수입 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입 밀의 국제가격(매수가격)이 20~30% 오르고 있으나 정부의 국내 제분업체 매도가격은 9월까지 동결함
  - 밀 등 식품 원재료를 쌀가루·국산 밀 등 대체 원재료로 전환 지원, 정부의 수입 밀 시장 매도를 꾸준히 시행
  - 10월 이후에도 수입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빵, 면류 등의 가격 급등을 억제할 계획
-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기금에서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교부(평균 가격과 이전 1년간의 평가 가격과의 차액 보전)
  - 2021년 추경 예산에서 예외적 상황에서의 보전기금(異常補填基金)을 230억엔 증액 조치하고, 종합긴급대책에서 435억엔 증액
  - 동 대책에서 2022년 1분기 및 2분기 예외적 상황에서의 보전기금 교부 기준을 특례적으로 완화함
- (전기 절약 포인트 지급) 전기 사용량 감소를 위해 일부 민간 전력회사에서 절약 시 소비자에게는 포인트를 부여
  - 도쿄전력EP社は 가정용 절전 장려 메일을 통해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SB과워社 역시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호쿠리쿠(北陸)社は 절전 캠페인을 통해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 다. 지방행정단체의 광열비 부담 경감

- 2022년 4월 편성한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을 통한 각 지역의 다양한 정책 대응 발표 (현재 지방의회에서 추경안 심의 중)
- (사업체 대상) 지역별 유가·물가 대책 일시 지원금, 지역 산업 지원금, 긴급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electricity\\_licensing/merit/](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electricity_licensing/merit/),

검색일자: 2022.6.29.

동아일보, 日 ‘전력자유화’ 부메랑... 일부 기업 전기료 2배로, 2022.6.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5379?sid=104>, 검색일자: 2022.6.29.)

- 45) 무역통계 등을 기초로 일반가정 월 전기사용량을 400kWh로 상정했을 때, 호쿠리쿠(北陸道) 지역은 2022년 2월 규제요금 상한인 11,200엔에 도달했으며, 홋카이도 지역은 2022년 8월 상한(15,700엔)을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지원 지원금 등의 대응 노력을 계획하고 있음

- (일시 지원금) 효고현에서는 96억엔 규모의 일시 지원금을 마련하여 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20만엔~30만엔, 개인사업자는 10만엔~15만엔 지급
- (지역 산업 지원금) 기후현에서는 지역 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10만엔을 지급하여 총 8.5억엔 지원
- (긴급 지원금) 야마가타현은 2022년 4~6월 중 어느 한 달이라도 2019년~2021년 동월과 비교하여 30%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법인 10만엔, 개인사업자 5만엔 지급(총 20.7억엔)
- (개인 대상) 양육 가구 대상 지원금,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촉진 사업 등 계획
  - (양육 가구 지원) 아오모리현은 0~18세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에 자녀 1인당 25,000엔 지급(사업 규모 총 42억엔), 오케가와시(사이타마현)는 중학생 이하 모든 아동 가구에 자녀 1인당 3만엔을 지급(총 2.8억엔)
  -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촉진 사업) 시즈오카시는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시 15만엔 이상인 경우 3만엔, 10~15만엔의 경우 2만엔, 5~10만엔인 경우 1만엔 지급

## 4. 독일

□ (현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sup>46)</sup>

○ 2022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7.9%로, 지난 3월의 7.3%, 4월의 7.4%에 이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

- 높은 물가상승률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이며, 식품 가격의 상승도 또 다른 주요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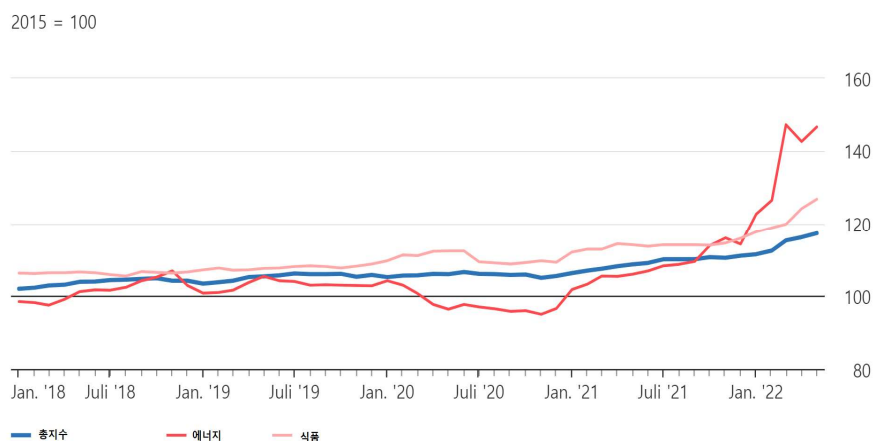
· 에너지 가격은 2022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35.3% 상승한 이후 5월에는 38.3%까지 증가함

· 식품 가격은 2022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11.1% 상승했고, 4월에 8.6% 상승한 이후 다시 한 번 크게 상승한 수치

·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4.5%이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3.8%로 높은 물가 상승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식품 가격이 점차 상승함

[그림 4]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출처: 연방 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6/PD22\\_245\\_6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6/PD22_245_611.html), 2022.6.14.

46) 연방 통계청, 2022.6.1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6/PD22\\_245\\_6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6/PD22_245_611.html), 검색일자: 2022.6.29.

- (대책) 독일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호 대책을 마련함<sup>47)</sup>
- (첫 번째 구호 패키지) 연정위원회는 2022년 2월 23일 광범위한 구호 조치에 합의
    - 2022년 7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sup>48)</sup> 폐지
    - 주거급여 수급자, 학생, 직업훈련 수당 수급자에게 일회성 난방비 보조금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에 270유로 지원(2인 가구의 경우 350유로, 추가 1인당 70유로 증가), 직업훈련수당 수급자 및 학생들에게는 균일하게 230유로 지급
    -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관련 지출 정액공제가 1,200유로로 증가
    - 소득세의 연간 기본 공제액을 9,984유로에서 10,347유로로 인상
    - 장거리 통근자(21km이상)의 거리 공제를 38유로센트로 인상
  - (두 번째 구호 패키지) 연정위원회는 2022년 3월 23일 두 번째 구호 조치에 합의
    -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에너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 휘발유는 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리터당 14.04센트
    - 납세자에게 300유로에 이르는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 지급
    - 아동 1인당 100유로씩 아동수당 추가 지급
    -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200유로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
    -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10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
    - 2022년 6월부터 3개월간 9유로 대중교통 티켓(Neun-Euro-Ticket) 발행
      - 월 9유로 고정 요금으로 독일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제4차 코로나 세제 지원법) 2022년 2월 16일 내각이 합의하고, 5월 19일 연방 하원을 통과함
    - 결손전기이월 2023년 말까지 연장
    - 가속감가상각제도 1년 연장
    - 재택근무 소득 공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단축근무수당 보조금 비과세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특별급여에 대하여 최대 4,500유로까지 비과세

47) 연방 재무부, 2022.6.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r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6.20.

48)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은 2000년에 도입되었고 “녹색 전기요금(Ökostromumlage)” 이라고도 불리며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및 수력 발전소의 확장에 사용되었음 (연방 정부, 2022.5.2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eeg-umlage-faellt-weg-2011728>, 검색일자: 2022.6.29.)

-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신고기한 연장
- (경제 지원 패키지) 2022년 4월 8일 린드너 재무장관과 하벡 경제기후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
  -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KfW 대출 프로그램(KfW-Sonder- programm UBR)
    - 최대 1억유로 규모의 특별 대출과 신디케이트 대출로 나누어짐
  - 연방 및 주 정부 보증 프로그램 2022년 말까지 확대 연장
  - 에너지 판매 기업의 추가 증거금 보전 위기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한시적 지원
  -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단일형(targeted) 지분 혹은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으로 자본 기반을 안정화하도록 함

## 5. 프랑스

### 가. 통화정책<sup>49)</sup>

- 유럽중앙은행(ECB)의 6월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프랑스 중앙은행은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sup>50)</sup>
  -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3가지 정책금리(기준금리 0.0%, 한계대출금리 0.25%, 수신금리 -0.50%)를 25bp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2011년 7월 이후 11년만의 인상임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의 순 매입은 7월 1일자로 종료하고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의 순 매입을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9월에 더 큰 폭의 인상(a larger increment)이 적절하다고 발표
    - 인플레이션 전망이 2022년 6.8%, 2023년 3.5%, 2024년 2.1%로 모두 3월 전망<sup>51)</sup>(각각 5.1%, 2.1%, 1.9%)보다 상승
    -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도 2022~2024년 각각 3.3%, 2.8%, 2.3%로 3월 전망(각각 2.6%, 1.8%, 1.9%)보다 상승

### 나. 재정지원 및 기타대응 정책

-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4월 1일부터 연료가격을 리터당 15센트씩 인하하는 지원방안을 발표<sup>52)</sup>
  - 연료비 지원은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약 20억 유로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유통업체를 통해 가격할인을 진행하고 관련 소요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

49) 1999년부터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권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전되어 프랑스 중앙은행은 ECB의 결정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함

50) ECB,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6.9.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609~122666c272.en.html>, 검색일자: 2022.6.28.

51) 유럽중앙은행, Combined monetary policy decisions and statement, 2022.3.10.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conf/shared/pdf/ecb.ds220310-c4c5a52570.en.pdf>, 검색일자: 2022.6.20.

52) 프랑스 정부, 15 centimes en moins par litre de carburant dès le 1er avril, 2022.3.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15-centimes-en-moins-par-litre-de-carburant-des-le-1er-avril>  
검색일자 : 2022.3. 21.

하는 형태로 실제 표시가격은 동일하지만 지불시 할인이 적용됨

- 이번 조치는 세금 인하가 아닌 재정지원임을 강조하면서 석유 개발업 및 유통업체의 유류비 인하 노력 동참을 권고함

□ 물가안정 정부 지원대책(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des Français)을 시행<sup>53)</sup>

- 급격한 물가상승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각료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발표함

- 이에 따른 주요 조치로는 ①에너지 지원금 지급 연장, ② 저소득층 대상 ‘푸드 체크’ (food check) 지원, ③연금 및 사회급여 조기수령, ④공무원 임금 동결 해제, ⑤TV시청료 폐지

- (에너지 지원금 지급 연장) 기존 6월까지 예정이었던 리터당 15센트(부가세 제외) 연료가격 인하 지원을 2022년 말까지 연장

- (푸드체크 지원) 식품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유로(어린이 1명당 50유로 추가)의 식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계획임

- \* 푸드체크에는 약 10억유로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행령으로 실시하고 추후 각료회의 논의를 통해 재정법안에 포함될 예정

- (연금 조기수령)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및 사회급여를 재평가 받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음

- (공무원 임금 동결 해제) 급여회의 결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570만 공무원의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최대 증가폭임<sup>54)</sup>

- \* 총 임금 증가율 5% = 일반임금 인상 3.5%+연평균 개인 증가율 1.5%

- (TV 시청료 폐지) 올해부터 공영방송 시청료를 영구 폐지하며, 이로 인한 가구 구매력은 연간 138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프랑스 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된다면 ECB의 기준금리 인상결

53)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Conseil des ministres du 11 mai 2022.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2022.5.11.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85112-conseil-ministres-11052022-protection-du-pouvoir-d-achat-des-francais> 검색일자: 2022.5.23.

54) 프랑스 정부, Hausse de la rémunération des agents de la fonction publique,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hausse-de-la-remuneration-des-agents-de-la-fonction-publique>, 2022.6.29. 검색일자: 2022.6.30.

정에 따라 연내 점진적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힘<sup>55)</sup>

- 금리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실질금리는 상당 기간 마이너스로 유지됨에 따라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에서 대해서는 일축함

□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 가격 동결조치 유지를 결정<sup>56)57)</sup>

- 르메르 재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가격 동결조치<sup>58)</sup>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 가스 가격은 동결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은 4% 이내로 제한될 것이며 2023년 까지 대폭적인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함
  - 가스 공급체인 Engie와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관세를 동결하여 가스가격 인상을 차단하는 시행령(Décret n° 2021-1380 du 23 octobre 2021 relatif aux tarifs réglementés de vente de gaz naturel fournis par Engie et faisant application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R. 445-5 du code de l'énergie)을 실시함
  - 전기가격 역시 전력공급업체(EDF)가 일정량의 전력을 고정가격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관세인상을 통한 인상폭을 4%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함<sup>59)</sup>
- 하지만 약 20억유로의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월말 수정예산법안 또는 2023년 예산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함

55) 프랑스 은행, L' Eurosystem et sa politique monétaire : d'un « dilemme impossible » à une feuille de route possible pour la normalisation, 2022.5.6.

<https://www.banque-france.fr/intervention/leurosysteme-et-sa-politique-monetaire-dun-dilemme-impossible-une-feuille-de-route-possible-pour-la> 검색일자: 2022.5.26.

56) 국가에너지총무부즈만 정보사이트, Les tarifs réglementés de vente de gaz naturel d' ENGIE n' évoluent pas le 1er juin 2022, car ils ont été bloqués depuis le 1er octobre 2021, 2022.5.30.

<https://www.energie-info.fr/tarifs-reglementes-de-gaz-dengie-toujours-geles-au-1er-juin-2022/>, 검색일자 :2022.6.22.

57)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경제정책 주간 정부정책 동향,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332305&page=1](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332305&page=1), 검색일자 :2022.6.20.

58) 에너지 가격 동결조치는 유럽의 시장가격의 이례적 상승으로 인한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동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과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법령조치임(2022년 2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현재 가스가격은 2019년의 4배, 2020년의 6배 더 높은 수준)

59) 프랑스 정부, Le Gouvernement veut limiter la hausse du tarif de l'électricité à 4%, 2022.1.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gouvernement-veut-limiter-la-hausse-du-tarif-de-l-electricite-a-4>, 검색일자 :2022.6.23.

- 물가 상승에 대응해 자영업자, 학생,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인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sup>60)61)</sup>
  -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격자 약 3800만명을 대상으로 100유로를 일시 지급함
    - 2021년 1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6,000유로 미만의 보수를 받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 또는 월 순 연금 총액이 2,000유로 미만인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함

<표 2>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 일정

(단위: 억유로)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문 근로자</li> <li>- 비급여 근로자(자영업자, 농민, 프리랜서 등)</li> <li>- 직업훈련생, 장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li> <li>- 장애인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li> <li>- 장학금 비수혜 학생 및 주거지원 대상 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자</li> </ul>

출처: 프랑스 정부 공공서비스 사이트, 2022.2.7.

- 에너지 가격 지원과 함께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제한 (bouclier loyer) 실시<sup>62)</sup>
  - 정부는 2023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임대료를 3.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임대인은 매년 프랑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대료 참조 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를 토대로 임대료 금액을 책정하게 됨(현재 임대료 x 계약 분기의 IRL / 전년 동기의 IRL = 새 임대료)
    - 연말까지 임대료 참조 지수는 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이 적용되면 1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최대 3.5%까지로 제한됨
      - \* IRL 증가율 : 2022년 1분기 2.48%, 2021년 1분기 0.09%, 2020년 1분기 0.92%

60) 프랑스 법률사이트, Décret n° 2021-1623 du 11 décembre 2021 relatif aux modalités de versement de l'aide exceptionnelle prévue à l'article 13 de la loi n° 2021-1549 du 1er décembre 2021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2021.12.1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4471405>, 검색일자: 2022.6.28.

61) 프랑스 정부 공공서비스 사이트, Indemnité inflation de 100 euros : qui peut en bénéficier et dates de versement?, 2022.2.7.,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307>, 검색일자: 2022.6.28.

62) 프랑스 정부, Les loyers plafonnés à 3,5 % pendant un an, 2022.6.27.,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s-loyers-plafonnes-a-3-5-pendant-un-an>, 검색일자: 2022.6.29.

- 이에 따라, 맞춤형 주거수당(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sup>63)</sup>도 3.5% 인상시키고 향후 수정재정법안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

63)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로 소유자와 국가 간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임대료 상한 설정 및 임대료 조정 등의 제약을 받게 되며, 임대인에게 지원되는 형태로 임차인은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됨